‘신분증 사본’ 요구 보이스피싱 극성… 금융사 ‘나 몰라라’

사본 인증 명의도용 피해자들 권리구제 분쟁조정신청
“금융당국·금융사가 책임을 피해자들에 뒤집어씌워”
금감원 “장기적 안목에서 생체인증 시스템 도입해야”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 등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비대면실명거래 확인 오류 사고 권리구제를 위한 금감원 분쟁조정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분증 사본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보상부터 대책까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을 사칭해 신분증 사본·개인정보 요구하는 경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8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신분증 사본 인증 피해자들이 ‘비대면 신분증 사본 인증 전자금융실명거래 오류사고 권리구제를 위한 금감원 분쟁조정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피해자 모임 공동대책위원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오류사고 발생 피해거래는 최근 5년간 338건 발생했다.

신청인단이 청구하는 분쟁조정액은 총 24억5000여만 원이다. 대책위는 이 가운데 회수된 피해환급금·채무부존재 확인 등을 제외한 재산피해액 11억3700여만 원의 금융자산 반환과 반환일까지 연 6% 상사법정이자 지급을 청구했다.

대책위는 “신분증 사본 인증 오류 사고 피해자들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음에도 금융당국과 사고금융사 등은 책임을 금융소비자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씨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업은행은 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 접근을 허용해 중국에서 모바일·오픈뱅킹을 통해 위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피싱범에게 4억2000여만 원 정기예금 해지로 2억1700여만 원의 예금인출 및 3500만 원의 예금담보대출 오류사고를 냈다.

피싱범이 A씨 80세가 넘는 노모에게 신분증 사본을 받아내 대포폰을 개통한 뒤 이를 활용해 피해자 은행계좌에서 정기예금 담보 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A씨는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지 않고 원본판별의 기술도 없다고 변명하며 왜 비대면을 허용했느냐”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IBK기업은행이 예금인출·예금담보대출 오류사고를 내고도 예금반환을 거부하며 금감원에 사고대응조치를 허위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올해 1월 자녀 사칭 문자에 신분증 사본과 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를 보냈다가 2300만 원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B씨는 피싱범이 자녀를 사칭해 ‘몇 시간만 핸드폰을 쓸게’라며 보낸 링크를 접속해 앱을 설치했다. 피싱범은 앱을 통해 B씨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해 대출을 실행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이상징후를 감지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지만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만 대출이 실행됐다.

B씨는 “보이스피싱이나 당하는 멍청한 아내·엄마가 됐다는 자괴감이 들었다”며 “신분증 사본 인증의 심각한 부작용을 예상 못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절규했다.

경실련은 “이상거래 탐지에 실패한 사고 금융회사들이 오류 정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대출이자를 독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기관들의 엉터리 사본인증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라 지적했다.

앞서 4월 금감원은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에 따라 신분증 도용과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 범죄가 번지고 있는 만큼 금융권의 생체인증 활성화를 대책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비대면 신분증 실명 확인 방식의 허점을 노린 신종 명의도용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금융회사에서도 생체인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단기적으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겠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달라”고 말했다.

이건혁 기자 ghlee@skyedaily.com

‘순살 아파트’ LH 내부 직원까지 수사 의뢰… 실효성 논란

74개 아파트 관련 업체 관계자부터 내부 직원도 의뢰
2년 전 투기 논란 때도 “해체 수준 혁신” 말장난에 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15곳 단지 관련 업체 관계자부터 내부 설계·감리 담당 직원들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살 아파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LH가 고강도 조치를 단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심의 눈초리가 남아 있다.

8일 LH에 따르면 LH는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드러난 15곳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를 비롯해 내부 업무 담당 직원 수사를 의뢰했다. 애초 LH의 수사 의뢰는 외부 업체 74곳의 관계자를 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부 감리·감독 담당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내부 직원이 연루되면 내부 감사를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의뢰에는 이례적으로 내부 감사가 선행되지 않았다. ‘순살 아파트’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국민적 불신이 커지자 외부 기관에 바로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LH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내부 감사를 하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자체적으로 조사하면 ‘봐주기식’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최근 LH는 입주민에게는 ’도색공사‘라고 공지해놓고 몰래 보강공사를 진행한 파주사업단장을 대기발령 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퇴직자 전관예우 문제도 커지고 있는 만큼 조직 진단도 외부 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다만 LH가 잇따라 내놓는 고강도 방안들이 실효성으로 이어질지 의문이 남아 있다. 7일 LH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혁신안을 발표한 2021년 6월 이후 최근까지 LH 퇴직자 2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았지만 취업 불가 판정을 받은 사례는 1명뿐이다.

당시 LH는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일자 “해제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며 혁신안을 내놨다. 유관 기업 취업 심사 LH 퇴직자 대상자를 상임이사 이상 7명에서 2급 이상 500여 명으로 확대하는 등 전관예우 근절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정작 제도 시행 이후 취업 제한 판정 받은 사례는 1건뿐인 셈이다.

최근 2년 2급 이상 퇴직자 7명이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설계·감리 등 건설 관련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혁 기자 ghlee@skyedaily.com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뉴스 드립

최원종 머그샷 거부… “신상 공개 필요 없으니 영구 격리해라”

분당선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22세 최원종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하지만 최씨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해 신분증 사진과 검거 당시 사진만 공개됐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씨의 얼굴·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최씨가 머그샷 촬영·공개를 거부해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사진을 배포했다.

gung**** 축구공을 훔치는 사람보다 축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더 나쁜 취급받는 우리나라.

idco**** 범죄자만 보호해주는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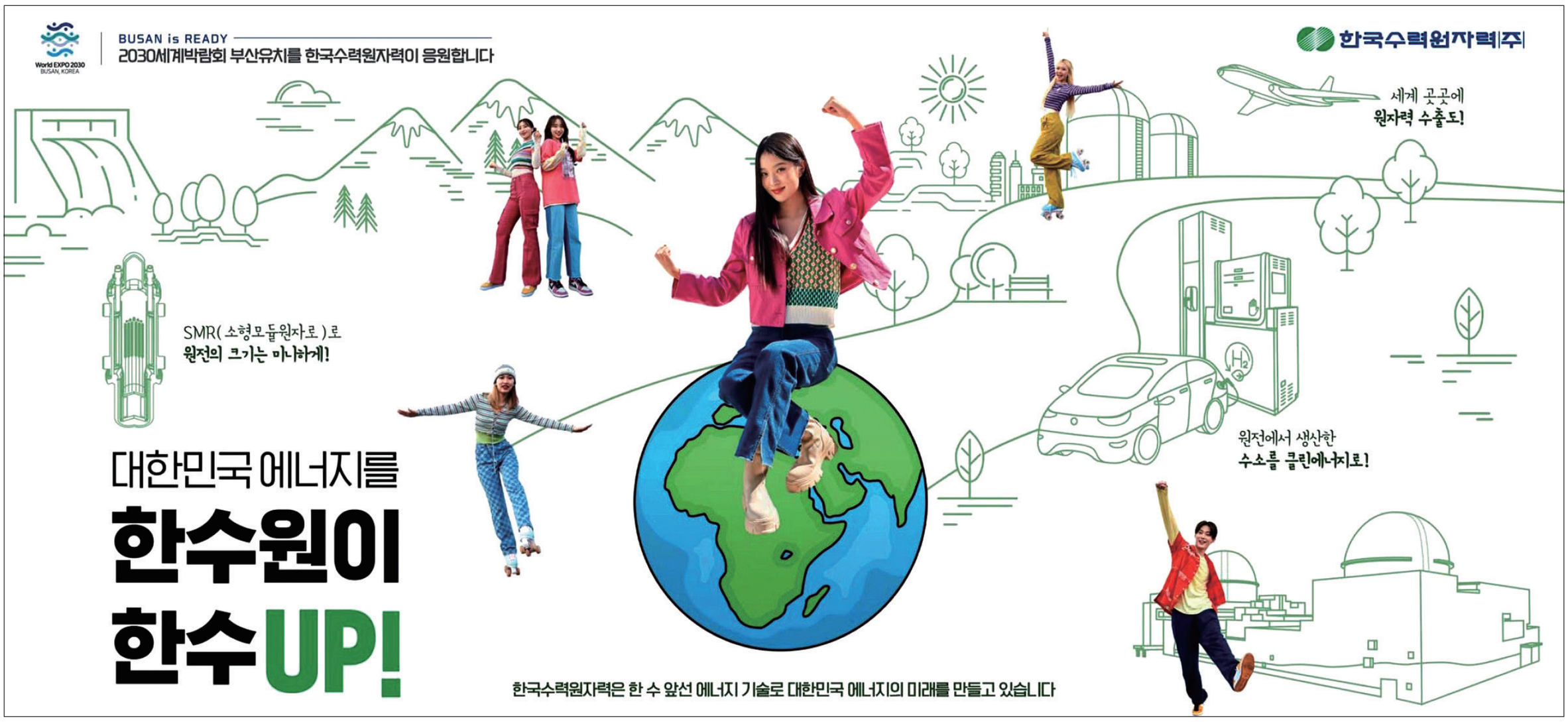
cast**** 신상 공개 필요 없다. 그냥 영구 격리해라.

음주운전 도주로 1명 사망·2명 중경상… “또 감형 해주겠지”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MBN 보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에서 SUV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음주운전을 한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한 상태였다. A씨는 이미 다른 곳에서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서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prec**** 초범에 반성하고 있고 도주 우려 없고 합의했다는 둥 갖가지 이유로 감형해주겠지.

gpma****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소식을 들어야 하나.

pdas****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